

‘檢 불출석’으로 맞선 이재명...“서면답변 출석사유 소멸”

2시간 남기고 불출석 맞ทบ

비상 의원총회 의원들 적극 만류

추석 밥상 여론 득 될 것 없다 판단

9일 공소시효...기소 여부 촉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심 끝에 6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의 출석요구 시각(오전 10시)보다 2시간 앞선 오전 8시께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 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했다”며 검찰에 이 대표의 불출석을 ‘맞통보’했다. 지도부는 물론 당내 의원들이 검찰 출석을 적극적으로 만류한 것도 이 대표의 결단에 적잖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이 대표는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이날 초 측근들에게 검찰에 나가서 담당하게 소명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 특유의 정면돌파형 스타

일상 검찰 출석을 강행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왔다. 실제로 이 대표는 경기지사로 있던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측근들의 만류에도 경기도 국감장에 나선 바 있다.

대선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였다. 당시는 이미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돼 경기지사 사퇴 시점만 저울질하던 시기였다.

물론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감에서 ‘결정적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당내에서는 성공적 한 수였다는 평가가 대체적이었지만, 비이재명계 일각에서는 가까스로 한숨을 돌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대선 패배 후 본격적인 수사 칼날이 들어 오는 지금과 당시의 상황은 천차만별이라고 이 대표 자신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명절을 코앞에 두고 검찰 포도라인에 서는 그림을 연출할 경우 연휴 내내 ‘추석 밥상’에서 회자되면서 여론전에서도 득이 될 게 없다는 당내 우려가 고조된 상황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게 검찰에 불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의중을 앞서 4선 이상 중진들과도 오

찬을 함께했는데 중진들 역시 불출석을 조인했다고 한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출석은 여러 상황상 득보다 실이 많다고 이 대표 본인도 판단한 것 같다”며 “취임 일주일 된 당 대표로서 다수 의원의 ‘출석 반대’ 여론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검찰 수사 강도가 점점 강해지면 이 대표 혼자 방어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며 “앞으로 당이 똘똘 뭉쳐 대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다수 의견에 따른 불출석 결정은 잘한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불출석 결정으로 이제 관심은 검찰의 기소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추석 연휴 첫날인 9일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해줬다고 보고 향후 법정공방에 대해 준비하는 분위기다.

안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비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정황으로 보면 답을 정해놓고 정치적인 절차를 거쳐 서면조사 등을 한 것 같다”며 “어떤 형태로든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발언 녹음·녹화...소환조사 필요없는 사항”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6일 “애초부터 검찰의 소환조사 필요성이 없는 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전 부산고검장인 양 위원장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검찰 고발 내용이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증언과 발언을 문제삼고 있는데, 이는 증언과 발언이 당시 국감장에서 모두 녹음, 녹화되어 있어서 이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 위원장은 “당시 국감장에서 이 대표가 발언한 백현동 용도변경 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의 서면조사에 응했다”면서 “고인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모 전 처장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발언과 관련한 조사는 중앙지검으로부터 서면조사 요구를 받고 준

비중에 갑작스럽게 검찰이 소환 요구를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애초 소환 조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면조사 요구를 했던 것 아닌가?”라면서 “검찰의 갑작스런 소환 조사 요구는 정당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는 기소를 전제로 망신 주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고발 혐의가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인데, 이는 허위사실을 표현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고발 내용 3가지 모두 사실의 표현이 아니다”면서 “기소해도 무죄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면조사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면서 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 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박홍근 “김건희 특검법’ 조속히 발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담은 시행령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위법 시행령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것은 주권자와 맞서겠다는 오만이자 독선”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의에서 “역대급 태풍에 오늘 국무회의는 취소됐지만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 시도는 취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법 기술자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

접 수사권을 축소한 국회의 입법 취지를 잘 알 것”이라며 “새 정부 취임 후 감사의 과도한 직접 수사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우리 사회의 합의된 개혁은 부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건희 여사를 두고 수사기관은 봐주기와 시간 끌기로 일관해왔다”며 “우리 당은 어제(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추가 조작과 허위 경력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국힘 “이재명, 법 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국민의힘은 6일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가 되려는 것이냐.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모든 의혹이 이 대표를 향하는데 정치탄압을 내세우며 소환에 불응하는 건 겹겹의 방탄에 의지한 채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가 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법 앞에 국민 누구나 평등하다”

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측이 ‘서면 진술 답변을 해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됐다’는 취지로 불출석 이유를 밝힌 데 대해서는 “민주당 입맛에 맞게 ‘소환’이 난데없이 ‘서면’으로 둔갑했다”며 “소환 결정을 마음대로 바꾼 것도 모자라, 소환 사유 소멸이라는 놀라운 해석까지 더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는 접고 국민께서 의혹을 거두실 때까지 검찰 소

환 등 수사에 충분히 응하는 게 도리”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태풍 피해 점검 화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다”며 “이 대표도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교수단체 “김건희 여사 논문 직접 검증...광범위한 표절 확인”

박사학위·학술지 게재 등 4편 “국민대 표절 부정 결론 철회해야”

교수 단체들이 국민대가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은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김 여사 논문을 검증한 결과 이문의 여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그 수준 또한 학위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여사 논문은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뤄졌다”며 “특히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무단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증 대상에는 김 여사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에니마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비롯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편이 포함됐다.

검증단에 따르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의 논문 일부를 표절했고, 개인 블로그 글과 기사 일부 등을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

검증단은 논문 총 860문장 중 220문장이 출처 표시 없이 베껴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 4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재조사 결과를 철회하고 재조사 위원회 위원 명단과 최종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도 후속 조치에 나서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회사 사정상, 매매

- 1. 대인동 156평, 신안동 176평
-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 4. 매매 - 평당 1300만원씩

문의. 010-3605-5000

투자하실분, 덕남동 임야

- 임야 2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도로접합, 개발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400만원(조정가)

문의. 010-3605-5000